



교섭속보

9호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노재욱

투표율 하루 만에 50% 넘어 파업의 급행열차 탑승완료! D-15

2021년이 재연되고 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첫날 50%로 찍어, 역대 최고 기록.

조합원의 파업 의지 하늘을 뚫을 기세

6월 28일부터 시작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하루 만에 60%를 넘겼다. 6월 29일 오전 기준 안암 60.1%, 구로 64.9%, 안산 66.3%로 파업의 열기가 확인되고 있다.

2021년도 노사가 맺었던 합의의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보여준다는 것은 지난 2년간 의료원이 조합원들에게 해줘야 할 것을 해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실망이며, 직원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음에 대한 분노인 것이다.

가재 총파업으로 가재 권리 찾으려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났다고 해서 그로 인한 어려움을 직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미래를 위한다며 직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된다. 의료경쟁의 심화 속에서 고대의료원이 진일보 하기 위한 정책 마련은 의료원과 직원 간의 결단과 협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조합원을 실은 파업열차는 우리들의 노동을 값이먹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희생만을 강요하는 고대의료원역으로 가는 궤도를 탈선한다.

조합원의 힘으로 움직이는 파업열차는 환자안전과 직원 행복을 비탕으로, 새로운 미래가 그려지는 새로운 고대 의료원역을 찾아가는 정당하고 자랑스러운 투쟁의 선로로 올라선다.

함께 하면 승리한다!

같이 갔다 같이 오는

조합원 참가 일정



6월 28일(수) - 7월 3일(화)
쟁의행위 찬반투표



7월 4일(화)
7월 10일(월) - 7월 12일(수)
N퇴근자 피켓선전전



7월 12일 파업전야제
D퇴근, off 참석

7월 13일 총파업

No 출근!!

D, E, N 근무자 참석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7월 총파업투쟁을 예고한다!

보건의료노조 쟁의조정신청 전국 동시 기자회견 진행



우리는 지금 병원의 요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다.

어제인 28일 보건의료노조 쟁의 조정신청 기자회견에 노재욱 지부장과 이용은 총무부장이 참가했다.

지난 5월부터 교섭을 진행해온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가 6월 27일 노동위원회에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동시 쟁의 조정신청에는 128개 지부 147개 사업장이 참가했으며 우리지부 역시 같은 날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올해 동시 쟁의조정 신청 규모는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로 2021년 124개 지부 136개 지부를 뛰어넘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의료붕괴 위기 상황에서 지난 5월부터 대사용자 교섭과 대정부 협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사용자측도 정부측도 책임있는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조정신청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사용자와 정부가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7월 13일부터 7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총파업투쟁에 나설 것이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용은 총무부장 현장의 고충 전해,

이어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용은 부장이 발언자로 참석해 “6개월의 트레이닝 기간 무보수로 일했으며 2년 2개월의 비정규직 기간을 버티며 정규직이 되었다”, “환자의 안전을 생각해야 하는 병원에서 인력이 없어 혼자근무를 하는 처지다. 매일 수백 건의 엑스레이 검사를 하면서 거동이 힘든 환자를 부축해줄 동료가 없었다. 매뉴얼에는 3인 1조 혹은 4인 1조 근무를 통해 상황을 대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가 배정된 검사실의 업무를 처리하기도 힘들어 옆 검사실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알기도 힘든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계처럼 환자의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병원에서 9.2 노정합의로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방사선사뿐만 아니라 많은 의료기술직 직원들은 큰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면서 “속절없이 2년이 지났고 동료들은 일터를 떠나고 있다. 정부가 바뀌면 지난 정부의 사회적 약속은 모른체 해도 되는 것인가. 약속은 이행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